

# 금융부문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 모색(1)

---

2009.2.3 | 박형준/새사연 연구원 | [hjpark@saesayon.org](mailto:hjpark@saesayon.org)

---

## 목 차

1.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의 기본양식
2. 상품화와 가격 그리고 자본주의 권력양식



---

<http://saesayon.org>

최근 정부는 자본확충펀드라는 이름으로 금융부문에 20조 원에 이르는 사실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호시절에는 자율을 목 놓아 외치고, 높은 배당을 자랑하며 자본 확충을 등한시 하던 금융기관들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곧바로 국민의 혈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역시 금융기관들이 위기에 빠진 근본 원인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강제하기는커녕 경영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 하며 미리 선을 긋고 있다. 금융권의 이런 행태와 정부의 퍼주기식 지원에 대해 보통 윤리적으로 비난하곤 한다. 이런 비판은 정당하지만 윤리적인 접근을 넘어서 권력의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1) 금융이 자본주의 사회질서의 기본 언어이며 권력의 기본 표현단위이자 양식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2) 금융부문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민주주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서 ‘post-crisis 정치경제체제’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의 기본양식

지금까지 모든 문명의 중심에는 권력양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군사조직과 같은 기구들이 권력양식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모두가 자연스럽다고 믿는 기본적 사회질서이다. 다양한 전자본주의적 사회체제가 존재했지만, 대부분 기본적 사회질서가 ‘왕후장상이 따로 있다’라는 말로 대변된다고 단순화시켜 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즉,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전체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성원들 간에 신분의 귀천은 정해져 있고 그를 자연스런 이치라고 믿고 살거나 그렇게 살도록 강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질서의 양식이었다.

###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두 개의 이론 틀, 아담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 질서의 근본 토대와 기본양식은 무엇일까? 바로 사적 소유와 가격이다. 즉, 인간과 만물이 사적 소유의 주체와 객체로서 규정

되고, 모든 소유물의 가치는 가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더 나아가 그것들이 시장에서 등가로 교환되어 사회의 (분배)정의가 이루어지고 균형 잡힌 질서를 형성한다는 이상이다. 이러한 기본적 사회질서에 대한 믿음을 옹호하며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칼 마르크스는 상품의 물신성이라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그 안의 내재적 불안정성과 권력논리를 폭로하려고 시도했다.

지난 세기 동안에 자본주의에 대한 학문적 이해는 많이 전문화 되고 다양화 되었지만, 그 이론 틀은 여전히 스미스와 마르크스가 제시한 두 가지 상이한 접근방식으로 대변된다. 현대 주류 경제학이 어려운 수학을 사용하여 워낙 ‘신비주의’로 포장하고 있어 보통 사람들과는 무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그들의 교리를 매일매일 접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주류 경제학의 기본담론에 따라 정책을 만들고 미디어를 통해 선전한다. 이것이 기획재정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관광체육부, 국토해양부 등등 부서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입안하고 펼친다. 예를 들어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제를 철폐하는 정책을 내고, 환경부에서는 상수도 민영화안을, 국토해양부에서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유인하는 정책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학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학문이며,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신자유주의 ‘교황청’ 을 집어삼킨 금융체계의 불안정성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도 주류 경제학의 기본 교리에 입각해 만들어 놓은 정치경제 구조, 특히 금융체계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했다. 지난 30여 년간 자율적 조정시장에 대한 환상을 좀 더 강화한 형태의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정치경제 체제의 변화를 주도해 왔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더 증폭시켰고, 그 결과 체제전환 과정 중에도 세계 곳곳에서 정치경제적 위기를 야기하며 민중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곤 했다. 우리는 1990년대 말에 몸소 위기를 겪은 바 있으니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위기의 해일은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마침내 신자유주의의 ‘교황청’이 위치한 미국의 월 스트리트를

집어삼키고 말았다. 자본주의 자체가 과산한 것은 아니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의 실패는 미국주도의 자본주의적 승리주의(triumphalism)에도 타격을 입혔다. 구 소련의 붕괴 이후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며 자본주의적 시장체제의 승리를 선언해 유명해진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최근에 이번 금융위기의 근원적 원인이 미국식 모델의 한계에 있다고 말하며 체제의 실패를 주장해 다시 화제가 된 일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위기의 해결책도 주류 경제학의 틀 내에서 모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취한 대응들은 조금은 ‘과격적’이긴 했지만 신용경색 국면이 전면적 뱅크런(bank run)이란 과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2008년 말 현재는 금융부문의 급작스런 동요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실물부문이 침체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경기부양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구체화 되어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전 지구적 정치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주요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학자, 미디어,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post-crisis 세계 정치경제체제가 이전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

### 오바마와 이명박, 다르지만 같은...

위기에 처한 미국과 전 세계 경제를 구원할 ‘슈퍼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임명한 경제관련 장관, 비서진, 자문위원들은 모두 주류 경제학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재무부 장관 팀 가이쓰너(Tim Geithner)는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철저히 월스트리트의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경제 위원회의 위원장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는 경제학자로서 클린턴 정부 말기에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그의 선임자 로버트 루빈, 전 FRB의장 앨런 그린스펀과 함께 1933년 제정되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분리를 유지해온 글라스-스태갈 법안을 1999년에 폐지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이 법안의 폐지와 연관된 금

용시장의 전반적 규제완화 조치는 이번 위기가 심화되어 폭발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경제회복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폴 볼커(Paul Volker)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 FRB와 월가의 은행, 재무부를 두루 거치며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1979년부터 1987년까지 FRB 의장을 역임했다. 그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의 막바지에서 기준금리를 20퍼센트까지(1981년) 올리는 등 극약 처방을 통해 인플레이를 잡았다고 해서 주류 학계에서는 높은 칭송을 받는다.

하지만, 많은 미국 노동자들은 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경기 침체로 실업을 당해야 했고, 경제 개발을 위해 부채를 끌어다 쓴 개도국들은 국가과산 위기를 겪어야 했다. 위기가 발생하는데 나름대로 한 몫씩 한 사람들로 꾸려진 ‘해결사’ 팀이 제시할 수 있는 위기-이후의 정치경제 체제는 이전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다시 경기 사이클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한 동안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강화 이야기가 많이 논의되기는 할 것이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은 더 심각하다. 이명박 정부가 부양책이라고 내놓은 정책은 이번 위기와는 별 연관이 없다. 취임하기 전에 추진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정책들을 그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000”라고 제목만 바꾸어 하나씩 내놓고 있다. 자본시장 통합법, 금산분리 완화 법안, 공기업 민영화, 한미FTA 비준, 종부세 무력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감세 법안, 부동산 규제 철폐, 4대강 정비라는 이름으로 대운하 사업 단계적 추진, 비정규직 확대 등 김영삼 정부 때부터 강력히 추진되어온 자유화, 민영화, 노동 유연화 기조에 ‘삼질경제’를 더한 신자유주의 정책 리스트를 상황 봐가며 하나 둘씩 내놓고 있을 뿐이다. 이전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부자를 위한, 강부자에 의한, 강부자의’ 정부라는 계급적 성격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차이는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들은 미국에서 시작된 금번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런 정책들이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위기를 더 심화시켜서 다른 나라들이 회복 국면에 들어설 때 한국은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는 않을까 우려된다.

## 문제는 어떤 위기-이후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언젠가는 세계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정확히 1년 후가 될지, 2~3년 후일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회복을 원하는가라는 문제다. 한국은 1997년에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이후 10년 만에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된 정치경제적 위기를 맞았다. 그 당시 취업을 준비 중이던 사람들은 요즘 언론에 많이 회자되듯이 ‘저주받은’ 세대가 되고 말았다.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제 번듯한 자리를 잡아 불혹의 나이에 맞는 역할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또 다시 대량실직 사태가 예견되는 상황을 맞닥뜨린 것이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했다고 생각한 여러 형태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단지 잠시 문제를 감춰두었던 것은 아닐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시로 한 전 세계 정치경제 체제를 놓고 볼 때도 같은 질문이 나온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규모와 기술적 측면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1930년대 대공황 이전의 체제와 같은 기초를 갖고 있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에 대한 맹신이 가져온 문제점이 폭발하면서 대공황으로 이어졌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케인즈주의 체제가 등장했다. 한 때 전후 황금기, 풍요의 시대라 불리며 케인즈주의 체제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다. 하지만 1970년대 장기불황으로 다시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강조하는 체제가 들어섰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체제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케인즈주의를 대안으로 선택해야 할까? 아니면,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 체제 모두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을 모색해야 하는가? 사실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을 끝낸 것은 케인즈주의 정책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파괴력이었다.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초토화되었기에 미국의 자본가들에게는 전 세계가 무주공산이나 다름없었다. 케인즈주의 호가 결국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침몰했고, 이를 대체한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능력을 보여주기는커녕 가는 곳마다 위기를 만들었다. 이제 본고장 미국에서 위기가 터졌으니 무슨 할 말



이 있겠는가!

### 위기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근본적 고찰이 필요하다

위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이번 위기를 단지 일시적 경제회복을 위한 계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근본 담론과 질서의 양식을 재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칼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대를 전후로 이미 200년간 많은 사상가들이 이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 왔다. 때로는 그러한 주장들이 대중 투쟁과 결합되어 사회주의 혁명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론적 대안이 있다고 해도 현존하는 체제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중요한 것은 당장에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삶의 사회적 방식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하겠지만,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지배계층은 사적 소유와 화폐적 부를 기본 구성요소로 하는 소유권 사회(Ownership Society)라는 허구적 상상력으로 우리의 꿈을 장악해 왔다. 그래서 그들과의 싸움은 소유권 사회를 기본 담론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권력양식을 이해하고 인간의 새로운 사회적 삶의 형태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자본주의의 근원적 문제와 대안이라는 엄청나게 큰 주제에 대해 완결적인 해답을 한 번에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첫 걸음은 댈 수 있다. 작지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첫 걸음을.

이 글에서는 이번 전 지구적 정치경제 위기가 대부분의 언론이나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규제완화로 인한 금융부문의 도덕적 해이에 국한된 문제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 자본주의 사회질서의 기본 토대와 양식에 내재한 모순과 자본주의적 권력양식의 ‘자연스런’ 한 과정으로서 설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금융은 자본주의 질서를 표현하는 언어, 즉 권력관계와 민중들의 일상적 삶 모두를 표현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a) 금융부문을 보편

적인 사회 서비스로 개념을 재정립함은 물론, (b) 지배적인 사회세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싸움의 주요한 장으로 만들어야 하며, 따라서 (c) 위기-이후의 체제는 단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를 통해 일시적인 시장의 안정성이나 경기회복을 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은행부문은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상품화와 가격 그리고 자본주의 권력양식

자본주의 사회질서는 가격을 기본표현 단위로 사용한다. 우리가 흔히 상품이라고 정의하는 재화와 용역뿐만 아니라, 땅이나 나무부터, 지식, 아이디어, 사회단체, 인간의 몸, 국가의 능력에 이르기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격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역사는 상품화의 확대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상품의 범주가 점점 더 커져 거의 모든 인간의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의 과정을 포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 가격이란 '숫자' 에 숨겨진 지배 이데올로기

지금은 상품이 너무 일반화되어 가격(또는 가치)이란 것이 마치 사물의 '자연적 속성'인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하지만,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보면 볼수록 이상한 것이 상품의 가격이다. 무게, 길이, 부피 등등의 물질적 특성처럼 객관적 측정 기준에 따라 표현되는 숫자가 아닌 가격이란 추상적 숫자가 표현하고 있는 상품의 본성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정치)경제학의 기본문제로서 이에 대한 대답이 경제학의 성격을 규정한다. 크게 보면, 대답은 상품의 가치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한계효용의 양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주류 경제학의 주장과 추상화된 노동자들의 사회적 평균노동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좌파 경제학의 주장으로 나뉜다.

이 글은 상품의 가격이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력, 즉 사회적 권력의 양을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기본단위라는 이론을 따르고 있다 (Nitzan and Bichler).<sup>1)</sup>



인격적 통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전자본주의 사회의 권력양식과는 다르게 자본주의는 비인격적 화폐관계를 통해 사회적 질서를 강제하는 문명체계다. 자본주의 문명이 폭력성이란 측면에서 그 이전 문명형태에 뒤지지 않는 데도 지배계급이 유연하게 권력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비인격적 화폐관계 뒤에서 익명성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가격이란 숫자로 이루어진 기본 질서의 표현형태가 주는 이점을 누린다. 가격은 그 어떤 사회형태의 표현 단위보다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며, 정밀하게 사회질서를 표현할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구분을 넘어서 보편적으로 사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공간적으로는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사회형태를 포괄적으로 대상화시키며, 미세한 차이라도 정밀하게 숫자로 만물의 위계질서를 표현할 수 있다. 화폐관계가 주는 익명성과 더불어 숫자가 부여하는 보편성은 사유재산과 가격체계가 자연현상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모두에게 갖게 하는 데 유리하게 작동한다.

### ‘자본화’의 공식, 기대수익 나누기 위험률

상품의 가격은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의 기본양식인 자본화(capitalization)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표현된다. 그 논리를 아래 식처럼 크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계산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미래의 기대수익과 주관적 흥분도를 합한 것을 위험률과 사회적 정상수익률로 할인한 값이다. 여기서 사회적 정상수익률은 국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채권같이 위험률 제로의 증권에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주관적 흥분도는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높은 기대감으로 인해 기대수익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감안하는 요소다. 주관적 흥분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 별 의미가 없고, 정상수익률은 모두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자본화 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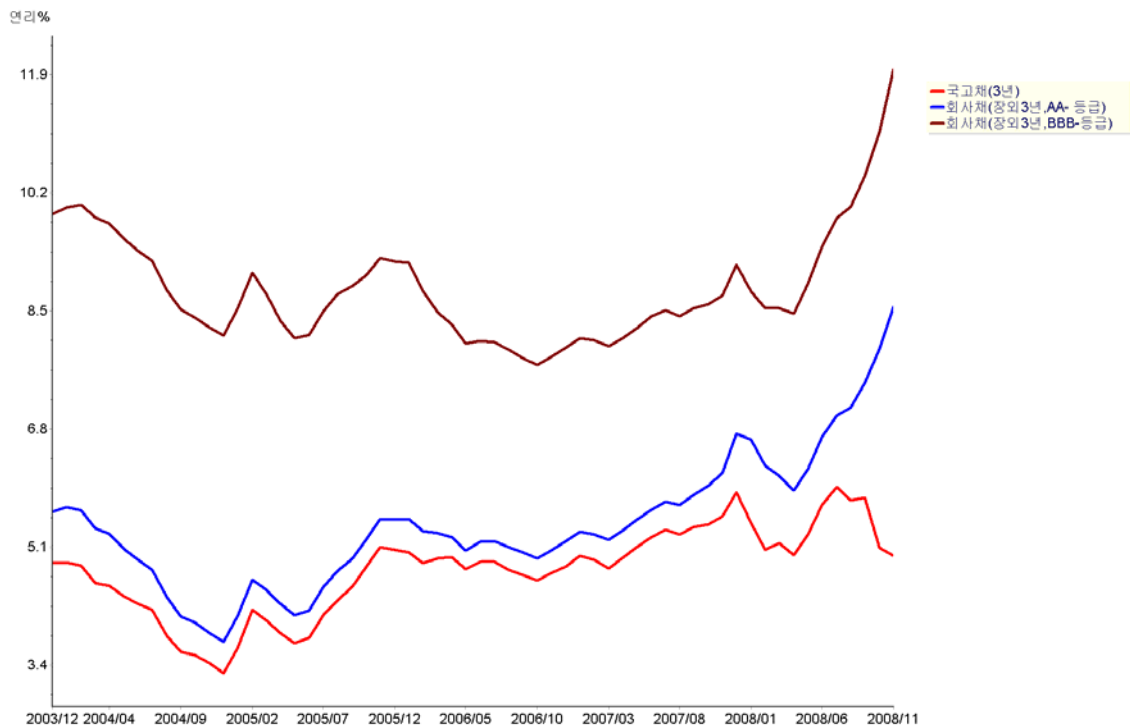
1) Jonathan Nitzan과 Shimson Bichler는 신고전파의 한계효용 이론을 비판하고, 노동가치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권력자본론을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두 사람의 이론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들의 모든 글은 [www.bnarchives.net](http://www.bnarchives.net)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방문하여, 직접 읽어볼 수 있다. 또한, 두 사람의 책 권력 자본론 이 번역되어 이미 한국에도 소개되었다 (참고문헌: New Imperialism or New Capitalism? (2004);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Israel (2002)).

을 미래의 기대수익과 위험률의 관계로 좀 더 단순화시킬 수 있다.

$$capitalisation \equiv \frac{future\ earnings \times hype}{risk \times discount\ rate}$$

현대 사회에서 자본화는 보편적이고 단일한 질서의 양식으로 쓰이고 있다. 재화와 용역의 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산수단의 가치, 노동자의 현재적 가치, 국가의 사회적 관리능력 등등 거의 모든 것이 이 논리를 바탕으로 현재적 가치가 계산된다.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언론에 거론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비율(LTV)을 예로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DTI는 노동자의 미래 소득을 할인하여 현재가로 계산한 후 부채와의 비율을 따져 그들이 주택관련 부채를 추가로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LTV는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미래 실현 가치를 현재가로 할인하여 계산하고, 그것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그림1. 국고채와 회사채 등급 별 이자율



기업과 국가도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 받고, 발행되는 국공채, 회사채, 은행채 등등은 그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된다. 최근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외평채의 CDS프리미엄이 7퍼센트대로 상승했다가 다시 3퍼센트대로 내려갔다고 한다. 이는 위험률 제로로 간주되는 미국 연방정부 발행 채권보다 그 만큼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각국 정부의 정치경제적 관리능력이 미국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그림1은 3년 만기 국고채와 두 가지 등급의 회사채의 이자율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자율의 차이는 각 기관의 위험률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그림에서 2008년 후반기에 들어 국고채와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급격히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치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신용경색을 피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춰 유동성 공급을 늘리려고 한 반면,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 즉 자본화는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시중은행은 이 시기에 정부의 현금지원은 왕창 받고 기업에게는 대출을 늘리지 않고 높은 이자율을 받아먹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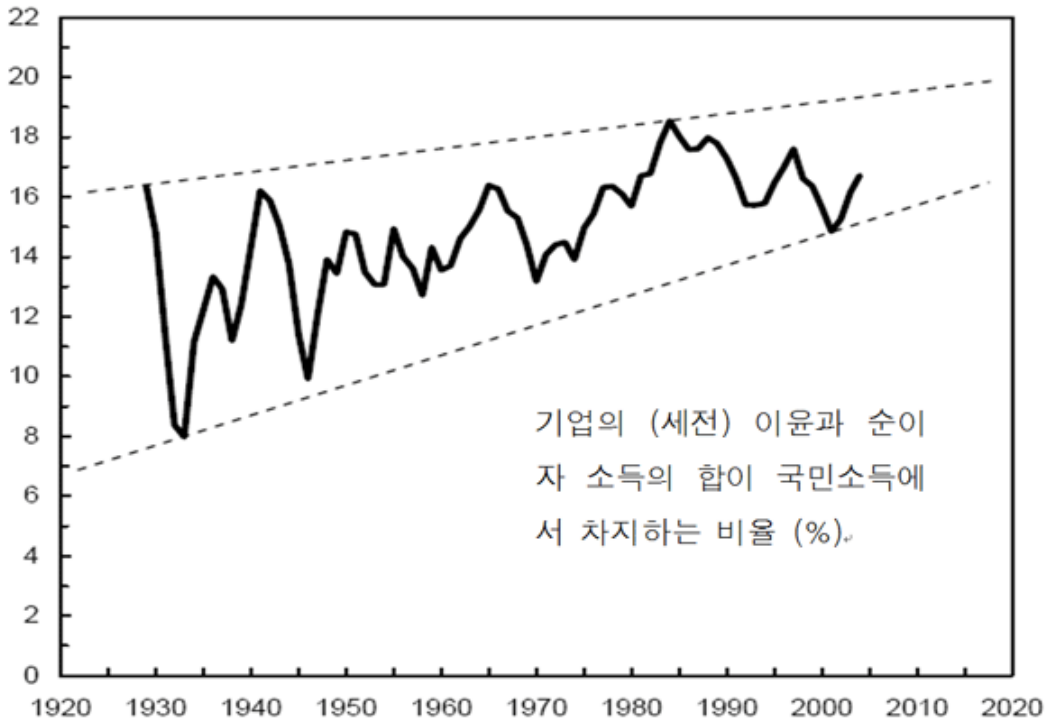
### 자본화는 결국 자본의 헤게모니 확대 과정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신용이란 결국 주체가 앞으로 벌 수 있다고 예측되는 돈의 총량을 이러한 자본화 과정을 통하여 현재 가격으로 할인하여 계산한 다음 일부를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본화는 주체가 사회적 과정의 진행방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래를 결정하는 힘에 대한 평가다.

자본화는 자본주의 사회질서의 보편적 양식으로 모든 사회적 과정에 적용되지만, 두 가지 상이한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생산과 재생산 과정 전반을 통제하는 국가와 자본의 권력을 평가하는 영역, 즉 자본축적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민중들의 삶의 질, 즉 의식주와 여타의 문화적 활동의 범위가 제한되는 영역이다.

후자의 영역 역시도 사회적 생산과정과 재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력과 관련된 싸움이 민중들의 노동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미래의 기대수익’이 반영하는 내용이 전자의 경우와 같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간의 사회적 영향력에 질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두 영역의 성격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민중들은 거의 모든 임금을 생활 필수품을 사서 쓰는 데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화폐는 재화와 용역으로 바꿀 수 있는 쿠폰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지배계층에게는 화폐적 가치로 평가되는 재산, 즉 자본축적은 사회적 생산수단을 장악함으로써 발휘되는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과정에 대한 지배력을 나타낸다.

그림2. 미국의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Nitzan and Bichler,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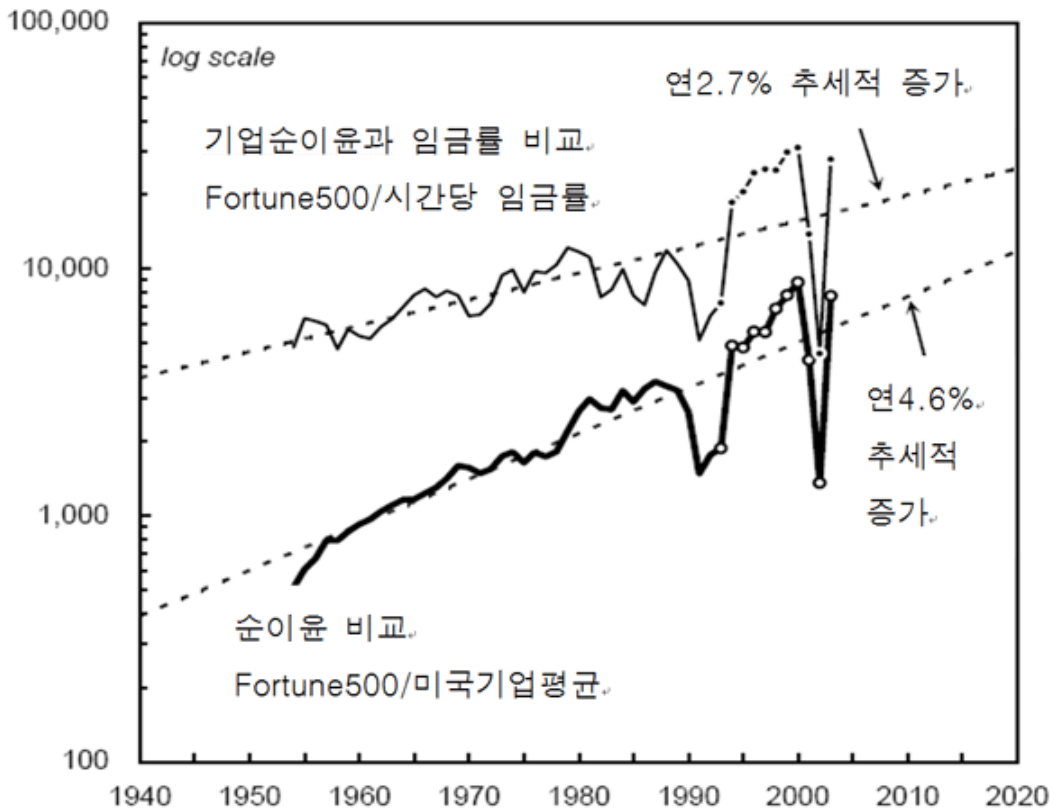
자본의 축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하나는 거시적 차원에서 전체 자본과 노동 간의 분배문제를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과정에 대한 장악력을 놓고서 자본들 간에 벌이는 경쟁의 측면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림2는 미국의 국민소득 중 기업이윤과 순이자 소득으로 이루어진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래프에서 미국의 자본은 지난 100년간 대공황 같은 불황기에 간혹 그 비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우상향

추세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변동폭도 좁혀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자본이 자신들의 몫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유지시켰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국내와 국외에서 정치경제적 과정에 대한 장악력, 즉 헤게모니를 잘 지켜왔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번 위기에 의해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긴 하지만.

그림2가 자본과 노동의 총량적 분배를 거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그림3은 미국의 지배적 자본으로 정의해도 무방한 Fortune500이 가진 사회적 장악력을 한편으로는 그들의 순이윤을 노동의 임금률과 비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일반의 평균이윤과 비교해서 차등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 초반 Fortune500과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률의 비율이 약 5,000이었는데, 1990년대 말 25,000으로 약 5배의 증가를 보였다. 자본의 평균 이윤량과의 비교를 보면 같은 기간 동안 500배에서 7,000배로 약 1,400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지배적 자본이 국내외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통해 사회적 과정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3. 미국의 지배적 자본의 차등적 축적 (ibid)



## 자본화를 통해 본 자본축적과 국가의 역할

여기서 자본의 사회적 과정에 대한 장악력에 대해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주류 학계와 언론에서는 기업의 자본화와 그 기본요소인 이윤을 시장에서의 수요/공급 문제로 환원시켜 설명한다. 예를 들어 2008년 여름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할 때는 ‘석유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고, 몇 달 지나지 않은 2008년 말에는 OPEC이 하루 생산량 200만 배럴을 줄인다고 발표했는데도 ‘석유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40불 이하로 내려갔다고 설명한다. 이는 기업의 이윤이 유용한 재화와 용역의 판매에서 나오는 순수 ‘경제적’인 것이라는 정의가 깔려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방식의 이윤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활동을 자본화 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사적 소유에 대한 보호부터 시작해서 군비지출, 치안, 산업정책, 특허, 저작권, 노동법, 거시경제 정책,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세금과 재정 등등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는 계층간 부의 분배와 자본의 수익과 연관되어 있으며, 할인되어 자본의 가치로 자본화된다.

우리에게는 재벌과 정치인들의 인적인 네트워크가 너무나도 친숙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 둘의 결합 자체는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다만, 그 동안 국가와 자본의 관계가 인적인 네트워크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뇌물과 특혜라는 윤리적인 문제로서 많이 다루어져 왔는데, 이것을 자본주의적 권력의 본질적 성격으로 확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즉, 뇌물과 특혜로 직접 연결된 인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자본의 축적은 구조적, 제도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국가권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 체제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국가가 노동에 불리하고 자본에 유리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요구하는 체제이다.

또한, 우리의 의식주와 여타의 문화활동이, 다시 말해 우리의 인간적 욕망 충족 방식이 자본이 정해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권력적 현

## 금융부문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 모색(1)

상이다. 즉, 신세계 이마트에서 식재료 사고, 현대 자동차 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IE 안 쓰면 공인인증도 못 받고, 애플 아이팟을 하루 종일 귀에 꽂고, 삼성과 LG 가전제품으로 가득 찬 래미안/힐스테이트 등등의 아파트에 살고 있거나 사는 것을 꿈꾸며 살고 있는 현상 자체가 권력적 현상이다. (계속)

